

불확실성 시대의 에너지 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박주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불확실한 것이 언제는 없었겠지만 올해는 유독 '불확실성의 시대'란 표현이 잘 어울려 보인다. 미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개성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을 맞이하게 되었고 유럽연합은 영국을 떠나보낼 채비를 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자국 이익에만 매몰되어 고립의 길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은 국제정세뿐만 아니라 에너지시장에 대한 급격한 변화의 예고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주요 산유국들이 예상을 깨고 감산 합의에 이르면서 공급과잉의 늪에서 허덕이던 석유시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을 키울 요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닐까 싶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그동안 미국이 보여준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역할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중국과의 마찰, 중동 7개국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던 공약이 현실화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공약한 파격적인 에너지정책도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몇 가지 행정명령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의 현실화 가능성을 매우 높게 만든다. 트럼프는 7개 무슬림 국가에 대한 반(反)이민 행정명령 외에도 취임하자마자 TPP 탈퇴 행정명령과 미국 내 중단된 송유관 건설을 재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2015년 12월에 서명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탈퇴와 함께 유엔기후변화협약이나 녹색기후기금에 공여하던 재원의 중단을 공언한 바 있으며,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했던 청정전력 계획(Clean Power Plan: CPP)도 폐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 세계 신기후체제의 확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 더욱이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선봉장으로 나서왔던 EU도 올해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분열을 걱정하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신기후체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불안정한 정책 변화는 신기후체제의 불안정성과 세계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략에도 리스크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

하지만, 보다 냉정이 따져보면 파리협정은 이미 발효되어 있고, 미국은 세일혁명 배경으로 세계에서 가장 싸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를 추진할 가능성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세계 에너지시장 환경에 맞춰 우리의 에너지정책을 재점검해야 하겠지만, 너무 성급히 변화를 예단하여 정책 방향을 급격히 선회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일단 신기후체제는 다소 지체는 되겠지만 그 방향은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정책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역할의 중요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화석연료의 역할과 그 수명이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투자는 보다 확대되어야겠지만 시장 보급의 속도는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저탄소 경제로 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배출이 적은 천연가스를 징검다리로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불확실성 시대에 보다 합리적인 에너지 전략이 될 것이다.